

박근혜에 맞선 총파업 선거운동본부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정책공약 해설

2014. 11.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가 선거운동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 5

민주노총을 승리로 이끄는 3대 투쟁전략 8

민주노총을 재건하는 6대 혁신전략 35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는 3대 정치·연대전략 56

박근혜에 맞선 총파업 선거운동본부 Q&A 66

투쟁 사업장에서 온 편지 78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가 선거운동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

절박한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해 동지들을 대신해 나섭니다

전국의 선거운동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근혜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로 나선 기호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입니다. 민주노총을 살려내고, 현장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선뜻 함께 나서주신 전국의 여러 선거운동원 동지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박근혜의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흐른 지 오래입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파견업종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정책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며 공공과 민간 모든 영역에서 정규직 일자리는 줄고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마디에 통상임금은 후퇴하고, 휴일근로수당 삭제 등 임금체계 개악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철도-의료-교육 민영화 정책은 온 국민의 저항에도 강행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거리가 먼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고, 천인공노할 사이버 사찰은 어제든 오늘도 노동자-민중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노총 집행부는 박근혜와 남은 임기를 같이 하는 집행부이며, 오랜 기간 목숨을 건 투쟁에도 불구하고 방관 속에 궁지에 몰린 현장의 투쟁을 함께 해야 할 집행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공장을 멈춘 현장의 투쟁은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조합원들은 희망과 절망, 분노가 뒤섞인 마음으로 망루에 오릅니다. 이들과 어깨 결지 않는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아닙니다. 싸움에 지치고 절망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지 못하는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아닙니다. 투쟁하는 노동자, 바로 동지들이 민주노총의 주인입니다.

무기력하고 존재감 없는 민주노총을 만든 세력들은 결코 힘 있는 민주노총을 세울 수 없습니다. 단결이라는 미명 아래 정파끼리 권력을 나눠가지려는 자들이 강한 민주노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싸우는 방법을 잊은 민주노총을 바꾸기 위해서는, 싸움을 조직해 본 우리가, 정권에 맞서 투쟁을 벌여온 이들이 필요합니다.

선거운동원 동지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동지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우리 총파업 선본의 심장이며 얼굴이며 목소리입니다. 절박한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해, 투쟁을 통한 혁신을 이뤄낼 민주노총 건설을 위해, 한상균-최종진-이영주가 선거운동원 동지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에 맞선 총파업 선거운동본부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정책공약 해설



민주노총을 승리로 이끄는

3대 투쟁전략



투쟁해야 혁신도 있다

투쟁하는 민주노총 연행일치 지도부



■ 말로만 하는 투쟁은 그만! 말한 대로, 결정대로 투쟁하는
연행일치 지도부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깊어지자, 박근혜 정부는 장기 불황의 고통을 노동자 계급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자 단호하게 신자유주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삶은 이미 팍팍한데도, 저들은 냉혹하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우리가 단호하게 투쟁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삶을 지킬 수 없다. 고통을 분담하거나 양보하려 한다면, 그저 투쟁 시늉을 하는 데 그친다면, 위기에 빠진 야수들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정리해고로, 비정규직으로, 민영화로, 손배

가압류로 내몰려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버팀목이 돼 주지 못했다. 그동안 수많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 총파업은 번번이 철회되거나 형식적 동원을 넘어서지 못했고, 쟁과업으로 조롱받았다.

혹자는 조합원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탓한다. 그러나 지도부가 주저할 때 조합원들은 확신 있게 나서기 어렵다. 투쟁이 중단되거나 철회되면 ‘역시 안 돼’ 하고 사기가 꺾인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단호하게 투쟁을 선언하고, 기층에서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이 투쟁을 실제 조직하는 것이 맞물려야 한다. 이렇게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20살 민주노총은 이제 투쟁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1800만 노동자의 희망이 되려면 투쟁하는 민주노총, 투쟁하는 지도부를 구축해 결정적 승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는 말한 대로 투쟁하는 지도부가 될 것이다.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고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만들 것이다.

■ 박근혜의 각개격파 전략에 맞선 노동자 단결 투쟁 실현

승리하는 투쟁을 하려면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는 박근혜의 전략을 꿰뚫고 이를 분쇄할 수 있는 우리 편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서로 다른 노동자 부문에 대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투자활성화’, ‘경제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정책들은 민영화, 임금 억제, 노동유연화, 노조탄압 등 죄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상이한 공격에 직면한 노동자들이 단결해 저항하지 못하도록 이간질로 각개격파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면서 ‘철밥통’ 논리로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려 하고, 임금체제 개악을 추진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식이다.

민주노총은 서로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단결로 맞서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이간질에 놀아나지 않도록 이데올로기적·정치적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또, 공격받는 부문이 낱알으로 각개약진하지 않도록 민주노총이 확대된 연대 전선으로 모아내고, 정규직-비정규직, 공공부문-민간부문의 단결된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

잘 조직된 부문의 자신감을 분쇄해 전체 노동자 계급의 처지를 악화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전략에 맞서 이들을 방어하고, 동시에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을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위해서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민영화-공적연금-노조파괴 등 현장-부문 투쟁을 책임지는 지도부

박근혜가 당선한 뒤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의에 빠졌지만 이내 노동자들은 박근혜 시대에도 저항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철도노동자, 교사노동자, 보건의료노동자, 건설노동자, 삼성전자서비스와 통신노동자 등등이 투쟁에 나섰다.

지금도 공무원·교사들, 학교비정규직과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 밖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장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투쟁들은 대개 개별 부문에 내맡겨져 있었다. 광범한 지지 정서가 있었음에도 그에 비해 연대가 효과적으로 조직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개별 부문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투쟁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역할이 그저 기자회견에서 결의문 낭독하는 것으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대를 건설하고 힘을 집중해 그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승리가 다른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자신감을 줘 투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투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민주노총 전술 혁신

투쟁은 지도부 마음대로 언제든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쟁을 위한 지난한 조직 과정이 있어야 하는 한편, 물밑의 분노가 특정 조건과 맞물려 빠르게 솟구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준비된 투쟁을 해야 한다’며 일정을 뒤로 미룬다면,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릴 뿐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투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순간적인 폭발력을 살려내 투쟁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안타깝게도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적어도 두 번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한 번은 지난해 말 철도 파업과 민주노총 본부 침탈로 조합원들의 분노와 사기가 올랐을 때다. 이때 민주노총이 즉각 총파업을 선언했다면 박근혜 정부를 후퇴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한 번은 세월호 진실 규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냉담한 외면으로 대중적 분노가 확대됐을 때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투쟁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한편, 정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과단성 있는 판단으로 투쟁의 호기를 잡고 확고히 이끌어야 한다.

■ 광장의 저항에 연대해 결정적 힘을 제공하는 민주노총

지난 몇 년 동안 거리의 저항이 분출하곤 했다. 2008년 촛불항쟁은 단연 거대한 저항이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국정원 대선 개입과 세월호 진실 규명 문제로 거리 항의가 벌어졌다.

이와 같은 거리의 저항은 실업과 빈곤에 놓인 청년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자, 정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갈구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우파는 위낙 부패해 박근혜의 남은 임기 동안 부패는 거듭 폭로될 것이고, 그 가운데 일부 사건은 대규모 거리 항의를 분출시킬 수 있다.

이처럼 거리의 저항이 분출할 때 민주노총은 이에 민감하게 응답해, 거리의 운동과 조직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노총이 단지 조합원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편에 선다는 것을 뜻한다. 또, 단지 경제적 요구만이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민주노총은 거리의 저항에 파업으로 응답함으로써 투쟁을 전진시키는 결정적인 힘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조직 노동자 계급은 보수적이고 쇠퇴했다는 불신을 불식시키고 전체 운동을 이끄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2015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으로 박근혜와 한 판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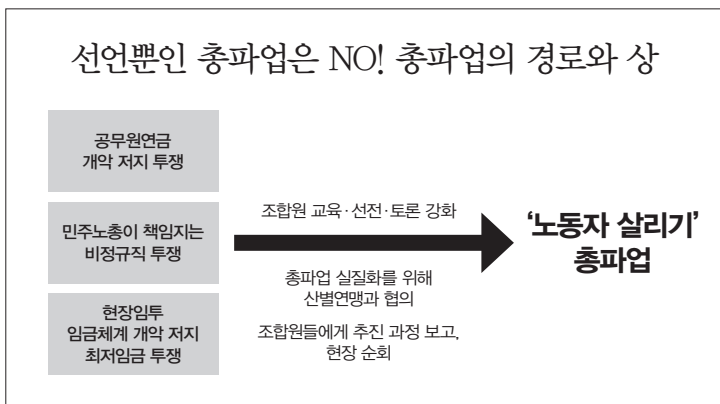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는 2015년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박근혜 정부와 한 판 대결을 벌이려 한다. 박근혜가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지금은, 박근혜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힘을 총 결집하는 투쟁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정책들과 관련된 법제도 개악 저지 및 개선 과제를 총화해 2015년 하반기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당위만 가지고 총파업 할 수 있는가, 총파업의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그렇다. 총파업 일정만 잡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과 계획이 필요하다.

첫째, 지금 뜨거운 현안이 돼 있는 투쟁들부터 잘 살려 나가야

한다. 박근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과 공기업 민영화·구조조정을 당면 과제로 강조했고, 얼마 전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12만 명이 모여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총궐기를 했다. 민주노총 새 집행부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공기업 민영화·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투쟁을 출범 첫 투쟁 과제로 정하고, 연말 연초부터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노동자 조건 방어를 공공서비스 방어(의료와 철도 민영화 반대)와 연결해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2015년 상반기에 벌어질 투쟁들과 잘 맞물려 동력을 모아 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투쟁이 중요하다.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곧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파견업종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기도, 시간



제 저질 일자리 확대 등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또 예상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민주노총이 받아안아 주요 투쟁으로 배치해야 한다.

셋째, 상반기 임금투쟁도 단지 단위사업장의 투쟁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중요 의제로 제기해 투쟁함으로써 하반기 근기법(임금체계 정상화)과 최저임금법 등 법제도 개선 문제로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실질임금이 줄어들어 임금 문제는 매우 중요해졌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3.2퍼센트였으나 실질임금 증가율은 0.5퍼센트에 불과했다. 최근 노동소득분배율은 공식 통계가 집계된 197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악해 임금 수준을 더 끌어내리려 한다. 임금체계 개악,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 통상임금 정상화 그리고 공적연금 개악 등을 서로 연결해 '인간다운 소득 쟁취 투쟁'으로 전개한다.

넷째, 하반기 총파업의 법제도 개선 과제가 실제로 조합원들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민영화, 임금, 구조조정, 간접고용, 해직자 노조가입, 노조 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하반기 총파업을 자신의 문제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부터 선전, 교육, 토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묶어 처지를 악화시키려는 단결권·단체행동권 제약 문제

도 특정 부문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체의 문제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조합원들에게 직접 다가가 기층 조합원들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말은 ‘세계’ 하면서 기층을 움직이는 노력이 없는 지도부를 조합원은 믿지 않는다.

다섯째, 각 산별노조 지도부와 협력해 하반기 총파업을 실질화하기 위한 의제와 일정 조율을 상반기 내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반기 투쟁이 하반기로 모아지도록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현장 순회 등을 실시할 것이다.

■ 기초

- 2015년 상반기 공적연금 개악-민영화 저지투쟁을 공공성 강화 기초의 전조직적 투쟁으로 돌파
- 분출하는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투쟁을 전체 노동자 투쟁으로 격상해 제기
- △공적연금 개악 저지 △법정 최저임금 △산별최저임금 △생활임금 △사업장 단위 임금 △임금체계 개악 저지 등 ‘인간다운 소득 쟁취 투쟁’을 연중 투쟁과제로 제기
- 각 부문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하나로 모아 공세적인 입법쟁취 투쟁으로 확산

- 상반기 투쟁과 소득-기본권 양 축의 법제도 개선과제를 총화해 정기 국회를 겨냥한 하반기 정치총파업 조직
- 총파업 조직화 및 투쟁 과정에서 반민주-부자특혜-폭압정권에 맞서는 ‘박근혜 퇴진’ 공세적 제기

■ 흐름

- [상반기] 공적연금 개악-민영화 저지투쟁
 - 정부 기만적인 비정규 종합대책 및 관련 개악입법 저지
 - 간접고용 종결기 등 비정규직 공동투쟁 조직
 - 임단투 및 최저임금 쟁취투쟁
 - 부문별 투쟁을 통한 요구안 정립 및 조합원 조직-교육-선전 사업 적극 배치
- [하반기] 생활임금 쟁취 투쟁
 -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정치총파업 투쟁
 - ※ 인간다운 소득 쟁취 투쟁 중 △임금체계 정상화(근기법) △최저임금법 등 법제도 개선 과제를 결합한 투쟁으로 확산



3년 임기 내 일대 진전을 이룰 ‘민주노총 재장전’ 핵심 투쟁의제

1. 노동기본권 쟁취 및 노조법 전면 재개정

- :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 :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 :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제도 철폐 및
전임자 임금 노사지율
- : 노조 설립신고 절차 개선
- :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 : 5인 미만 작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 산별교섭 제도화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와 사용자들이 노동기본권을 공격하고 있다. 일방적 고통 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려면 노동기

본권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억누르고, 필수유지 업무제도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탄압 수단이다.

노조법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해,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고 창구단일화 대상에 초기업별 노조를 일괄 포함해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투쟁은 각 부문에서 다양하게 벌어져 왔다. 최근에는 전교조가 규약시정 명령을 거부하면서 통쾌한 일격을 날렸다. 전교조가 정부의 압박에 맞서 단호하게 싸우면서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적 지지를 얻었고 그 결과 긍정적인 법적 판결을 이끌어냈다.

다양한 노동기본권 공격에 맞서 민주노총 차원에서 각 부문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하나로 모으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적극 나서 투쟁의 구심이 형성되면 광범한 사회적 지지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계

투쟁하는 노동자를 고통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169,100,000,000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청구된
손배배상금

₩18,200,000,000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청구된
가압류

기를 이용해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란 봉투 캠페인’과 같은 사회적 연대를 더 확대해야 한다.

노조 탄압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률과 제도들의 개선은 2015년 총과업의 핵심 의제다. 그 동안 법제도 개선 투쟁은 대국회 로비나 민주당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예를들면 2011년 노동기본권 확대와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야당들과의 공조 과정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손배가압류 제한, 산별교섭 법제화, 필수유지업무 폐지 요구가 제외됐는데, 이렇게 야당과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요구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 투쟁에 중심을 두고 대응해 나갈 때 법·제도 개선의 압력도 커질 수 있다는 관점을 분명히 견지해야 한다.

2. 비정규직 철폐 및 권리보장

- : 간접고용 원청사용자성 인정
- :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
- : 실업자-구직자-해고자 노동자성 인정
- : 파견법 철폐,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 : 시간제 일자리 반대
- :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정부는 11월 중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

다. 그 내용 중 핵심은 파견 허용대상 확대와 시간제 확대다. 그리고 기간제 사용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고 비정규직의 조건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를 확대하려는 것이므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또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도 묵묵부답이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산재보험 적용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시간제·파견 확대와 기간제 연장을 막고 간접고용 원청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근래 케이블·통신·서비스 등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활발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1심 승소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공동투쟁도 준비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 당면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를 위해 연대를 확대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 때 상층 집행부 중심의 사업 지원을 넘어, 연대 활동을 기층에서 조직하고 희망을 제공하려고 애써야 한다.

이런 투쟁이 승리할 때, 더 많은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할 가능성과 기회도 크게 열릴 수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파견제 확대 등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는 정규직 일자리를 공격해 단

시간 저질 일자리를 늘리는 유연화 정책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투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당 산별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

3. 임금체계 정상화 및 최저임금-생활임금 쟁취

- : 통상임금 정상화
- : 임금체계 개악 저지
- :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
- : 정년연장을 빌미로 한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화 분쇄

현재 임금 문제에서 핵심은 이른바 ‘임금 없는 성장’, 즉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공격받고 있다는 점이다.

2007~12년엔 실질임금이 2.3%나 하락했다. 최근에도 실질임금 상승률은 5분기 연속 하락했고, 급기야 0%대로 떨어졌다. 비정규직은 마이너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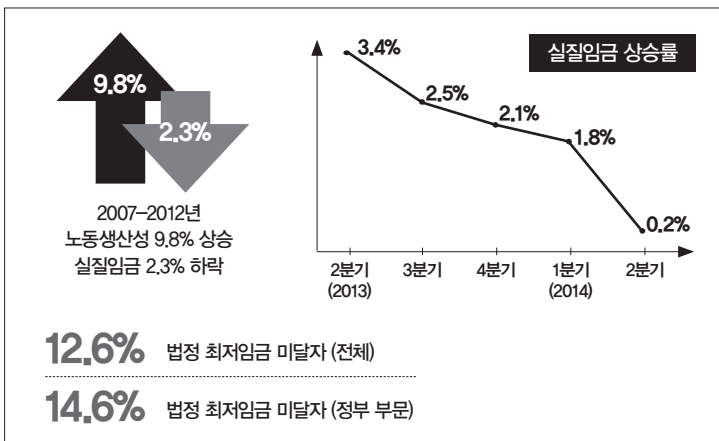
특히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수준을 대폭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표준생계비에 근접할 수 있다.

정부는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마련해 통상임금 확대를 막고 이중임금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여당은 휴일수당 삭감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악도 시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질임금 하락뿐 아니라, 노동 시간 단축을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이므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임금 투쟁을 개별 단위사업장의 문제로 다뤄 왔다. 그래서 올해 정부가 통상임금-임금체계 개악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며 차곡차곡 공격을 쌓아가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올해 상반기에 ‘앞바퀴는 통상임금, 뒷바퀴는 최저임금’을 달고 달리는 자전거를 상징으로 내세워 임금 문제를 부각한 것은 좋았으나, 그 또한 상담 캠페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만약 이런 기조로 대중투쟁 건설에 적극 나섰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에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을 끌



어내는 효과를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임금 투쟁은 단위 사업장 차원의 접근을 넘어선 전 계급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임금체계 개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묶어 실질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4. 민영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 철도-의료-교육 등 민영화 공세 저지

: 모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정부는 경쟁도입,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작년 수서KTX 법인 설립 이후, 공항철도 매각이 진행되고 있고 본격적인 철도 분할 민영화의 시작인 화물 운송분야 분리 방안이 곧 나올 예정이다.

의료민영화 역시 올해 내내 온갖 꼼수로 계속 추진됐다. 병원 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에 이어 영리병원 설립, 병원 인수합병 허용, 원격의료 등 중요한 쟁점들이 남아있다.

정부의 민영화 추진은 공공부문 ‘정상화’ 추진과 직결돼 있다. 최근 정부는 ‘정상화’ 1단계를 완료했고 곧바로 공공부문 ‘정상화’

2단계 추진을 이어갈 것을 분명히 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철밥통’ 공격(성과연봉제 도입, 근속승진제 폐지 등)을 지속하면서 공공기관 자회사 퇴출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돕기 위해 새누리당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연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고립시켜 투쟁을 약화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 후퇴와 안전 위협을 낳는 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계산이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를 지키려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이 중요하다. 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는 필연적으로 공공서비스 악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조건 모두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상화’ 2단계가 본격적인 민영화임을 폭로하며 광범한 민영화 반대 여론을 모아가는 일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또 해당 노조들과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민영화와 공공부문 ‘정상화’ 2단계 추진에 맞서 투쟁 태세를 갖춰야 한다. 박근혜의 집요한 민영화 추진을 좌절시키려면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고 해당 부문의 각개 대응이 아니라 민영화 반대 전체 투쟁 전선을 만들어가야 한다.

해당 노조들의 실질적인 연대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각 노조의 상황에 좌우되기 보다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맞춰 공동

투쟁을 건설해 가야 한다. 올해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이 실질적인 공동의 투쟁을 조직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 점은 아쉽다. 민주노총은 해당 노조들의 실질적인 공동 투쟁이 가능하도록 민영화 반대 투쟁 전선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특권층’이라고 비난해 이간질하는 박근혜의 분열 전략에 맞서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이런 공격은 민영화 사전 작업이며, 동시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조건 후퇴를 발판으로 사기업 부문의 조건을 악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민영화에 반대하는 ‘KTX민영화저지범대위’,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같은 각종 연대 기구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민영화 반대 운동을 하나로 모아가기 위해 ‘민영화저지공동행동’과 같은 연대 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5. 구조조정 저지 및 정리해고 철폐

：상시적 구조조정 시대, 新고용안정 투쟁

：정리해고 철폐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구조조정·정리해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는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한국 수출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했던 제조업의 위기도 여러모로 우려를 낳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수익성이 점점 하락하고 있고, 국내 자동차 기업들도 그 영향 속에 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았던 조선업에선 빅3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조선업에서는 이미 임금 삭감과 부분적인 인력감축이 시작됐다.

요컨대, 세계경제의 장기불황과 경쟁 격화 속에서 제조업에서도 다시금 구조조정의 칼날이 노동자들을 향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방어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하는데 이 때 양보론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뿐 아니라 임금·노동조건을 단호히 방어해야 한다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글로벌 생산체제에서 한 공장에서의 양보 교섭은 다른 공장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그것이 또다시 부메랑이 돼 더 큰 양보 압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험하다. 양보 교섭은 노동자들에게 점점 더 커다란 고통을 가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투쟁의 힘을 갉아먹는 것이다.

기업주들은 흔히 구조조정·정리해고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정규직·여성 노동자들을 우선 해고하거나 공격하곤 하는데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에 맞서 비정규직·여성 노동자들을 방어하고 함께 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쌍용차와 같이 부도·파산 기업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에게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공적자금을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이것이 또 다른 매각으로 이어져 구조조정의 고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공기업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구조조정·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조직하는 구심이 돼야 한다. 2009년에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이나 공장을 점거하고 영웅적으로 싸웠다. 그런데 이 투쟁에 비어 있던 고리는 바로 민주노총의 광범한 연대 파업과 투쟁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이 실질적인 힘을 모아 쌍용차 전투를 방어했다면 2009년 쌍용차 파업은 우리에게 ‘해고는 살인’이 아니라 ‘투쟁의 희망’으로 기억됐을 수도 있다.

한편 경영상의 이유로 한 정리해고 조항 삭제, 집단 해고 규정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등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6. 공적연금 정상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 연금을 연금담게, 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사학연금

상향평준화 쟁취

: 공무원연금 개악 기도 저지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악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 개악안은 ‘더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최악의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노후 안정 하나만 바라보며 박봉(1백인 이상 민간사업장 노동자 임금의 77.6%)을 참고 일해온 공무원들에게서 미래의 임금을 빼앗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다른 공적연금도 공격하고 있다. 이미 모든 노인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을 누더기로 만들었고, 향후 국민연금의 추가 개악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민연금은 이미 두 차례의 개악으로 ‘용돈 연금’으로 전락했음에도 말이다.

이는 공공 지출을 줄이고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다른 나라 정부들도 신자유주의 공격의 포문을 연금 개악으로 열곤 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특혜’, ‘철밥통’ 운운하며 ‘형평성’ 논리를 펴지만 공무원연금을 개악한 뒤 엇비슷한 논리로 국민연금 개악도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노동자, 교사노동자, 대학노동자, 보건노동자 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런 점을 분명히 알려내 다른 노동자들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시민사회운동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연대체 건설도 추진해야 한다.

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민영화,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반대 투쟁과 연결해 공공부문을 방어하는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일단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고 노후 보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 후 공적연금 강화에 나서야 한다.

담뱃세, 주민세,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 증세로 노동자들의 등골을 뿔지 말고, 이명박 정부 때 깎아 준 부자들의 세금을 되돌리고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기업들이 엄청나게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사회보험료를 걷어야 한다.

그런 속에서 공무원연금을 하후상박 식으로 개혁해 나가는 공적연금의 통합·재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이든 민간부문이든 노동계급 전체가 더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보험료를 걷어 현재의 ‘용돈연금’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위로 갈수록 구간을 촘촘히 매겨 누진을 강화해야 하고, 소득대체율도 70%로 끌어올려야 한다.

연금제도는 현재의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꾸고 정부의 공적연금 지출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

또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이 실현돼야 한다. 노동자들의 퇴직 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폐기돼야 한다.



투쟁 방관은 그만, 현장이 곧 민주노총이다

1. 노동·자본 대리전 의미를 갖는 현장투쟁을 노동계급 전체 투쟁으로
 - 노조탄압, 민영화 저지, 정리해고, 비정규직(간접고용·특수고용·공공부문) 등 노자 대리전을 ‘민주노총 투쟁’으로 격상
2. 현장의 투쟁요구와 일맥상통하는 전국 계급투쟁 전선 구축
 - 현장 임금투쟁과 법정최저임금, 산별최저임금, 생활임금, 노후임금(공적연금) 투쟁 등을 하나로 묶어 현장과 전국의 요구가 일치하는 투쟁전선으로
 - 사업장 노조파괴 대응 투쟁을 전체 노조법 개정-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전선으로

3. 투항적 노사정 야합, 면피성 대정부교섭 척결

- 박근혜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 추진에 파열구를
- 국회 꿈무늬 쫓는 투쟁, 당장의 성과를 위한 양보교섭 척결
-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한국노총과의 협력 시 민주노총 중심성 확보

4. 구조조정과 투기자본에 맞선 ‘(가)투기자본 대응 정책-전술센터’ 신설

- 자본의 전략에 맞서는 정책-전술 수립, 단위 사업장 대응을 넘어서는 총노동의 대응 실현
- 회계조작 등 다양하고 치밀해진 자본의 구조조정 방식에 맞선 노동운동의 전문역량 확보
- 초국적 자본 해외법인 노동자와의 국제연대 실현
- 투기자본은 철저히 규제(투기자본을 육성시킨 관련 법률 전부 폐기하고, 규제와 세금 대폭 강화)

민주노총을 재건하는

6대 혁신전략





민주노총 20년, 2015년을 혁신과 재건의 해로!

1

■ 스무 살 민주노총, 얼마나 자랐나

- 1995년 창립된 민주노총은 2015년 창립 스무 돌을 맞는다. 조합원 증가와 합법지위 획득 등 표면적인 성과도 있지만, 민주노조운동 위기론 역시 함께 자라왔다.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의 후퇴와 지역운동의 후퇴, 조직화 과정은 생략된 면피성 총파업 선언과 투쟁 무력화, 사회적 합의주의로 상징되는 제도화 전략의 모순과 문제점, 배타적 지지의 파탄에 이은 보수정당 의존성 증대 등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온 고질적 문제점이다.

- 슬프게도 민주노총은 후퇴를 거듭했고, 추락은 깊었다. 수석 부위원장이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고, 시도부의 일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조직 보위’ 앞에 은폐됐다.

- 전교조는 범외노조 위협을 받았고, 공무원노조는 창립 이후 법내 지위를 획득한 적이 없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통상임금이 깎여 나가고, 휴일수당이 삭감될 위기에 처하고,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이 사용자-정부의 모르쇠 속에 휴지조각이 돼도 투쟁은 일어나

지 않는다.

- 흠어지고 고립된 싸움을 하나로 모으고, 더 큰 투쟁으로 일으켜야 할 민주노총은 점차 조합원에게 ‘남의 조직’이 됐다. 희망버스의 운전대를 잡아야 할 민주노총은, 오히려 그 버스에 눈치 보며 무임승차하는 신세가 됐다.

■ ‘명망가’가 아닌 ‘싸움을 할 줄 아는 지도부’가 필요하다

- 후퇴 속에도 저항은 있었다.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분쇄 투쟁, 전교조 사수 투쟁, 철도-의료 민영화 저지투쟁, 삼성전자서비스와 등 간접고용 철폐 투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 등, 현장은 늘 악다구니를 쓰며 일어섰다. 투쟁하는 노동자와 힘을 합해야 할 민주노총은, 되레 자본과 정부를 향한 노동자의 분노를 나눠지는 신세가 됐다.

- 민주노총의 문제는 오히려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지도부가 들어서도 ‘높은 곳’에서 조합원을 내려다보는 명망가들이 회전 문처럼 돌아 등장하는 속에서, 혁신은 만들 수 없다. 상층과 기층의 분리, 투쟁하는 노동자를 품지 못하는 민주노총으로 굳어지는 것이 문제다. 투쟁하는 노동자와 공감하지 못하고, 이제는 투쟁하는 방법마저 잊어버린 민주노총이 오늘의 모습이다.

- 77일 옥쇄파업을 이끌었던 한상균 위원장 후보, 국민노총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켜온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후보, 단 한 명의 조합원도 포기하지 않고 전교조 사수를 이끌었던 이영주 사무총장 후보, 이들은 ‘싸우는 방법을 아는 집행부’다. 지난 20년간 민주노총을 후퇴로 이끌었던 ‘낮익은 얼굴’이 아닌, 현장에서 싸워온 이들이 집행부로 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창립 20년을 맞는 민주노총 혁신과 재건의 시작이다.



‘지역운동 강화’ ‘대산별 구축’ 씨줄-날줄 동시 강화

2

1. 지역운동 강화

- 지역본부 예산과 인력 확충
- 지역본부별 민주노총 대의원-중앙위원 사전토론 조직화를 통한 주요 의결기구의 논의력-현장성-결정의 권위 제고
- 지역본부 대의원-중앙위원 확대를 위한 특례 제도 도입
- 지역 내 각 산별 지역본부 통합운영 추진
- △비정규직 △공단 △공공부문 등 지역단위 공동교섭·공동투쟁 등 산별체계를 뛰어넘는 지역사업 추진

2. 16개 산별연맹 체제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대산별 구축

- △제조부문 △공공부문 △민간서비스부문 등의 대산별 연맹체제 추진
- 대산별 연맹 체제를 통한 조직갈등 해소 및 더 큰 산별투쟁 활성화

■ 지역운동 강화,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실현하나

- 지역운동이 실종되고 있다. 제한적인 집행력과 물적 토대의

한계도 임계에 다다르고 있다. 산별결합이 약화되고, 지역 내 사업장의 지역사업 결합도 천차만별이다. 이러다보니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운동에 대한 현장의 외면 속에 지역본부 운동 자체가 정파화되기도 했다.

- 조합비 징수 주체가 각 산별연맹이고, 총연맹을 거쳐 지역본부에 운영비가 지급되는 현재의 구조에서, 지역본부 운영비 비율 확대 등의 방식은 당장의 처방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산별 골간체계 자체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옳바를 순 있으나, 현실성이 지나치게 결여돼있다는 점에서 공허하다.

- 현실여건상 당장 큰 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지역본부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실질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지역본부의 논의력과 사업결합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운동이 조직 내에서 좀 더 발언력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2014년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가 실시되며, 각 지역본부 역시 직선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직선제를 계기로 지역 내 사업장-조합원 실태도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이번 직선제에 ‘조합원 직접선거’의 의미뿐만 아니라, 총연맹은 물론 지역본부가 명실상부한 ‘로컬 센터’로 활약할 수 있도록 지도력과 위상을 재조정하는 계기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 이런 조직 형식적 고민과 더불어, 지역 단위의 공동사업을 활

성화하기 위한 기획도 필요하다. 단순히 ‘당위’를 중심으로 조직형식을 재편하면 산별노조의 정체와 동일한 실패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지역 내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공단 △공공부문 등 지역 중심으로 공동 교섭이 가능한 단위를 분류하고 조직해 ‘품앗이’를 넘어서는 ‘공동 주체로서의 공동투쟁’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제기되는 생활임금 투쟁이나, 공단 공동교섭,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공동 조직화 사업 등은 모두 기존의 산별구획을 뛰어넘는 사업이며, 이중 일부는 실제 현실화되고 있기도 하다.

■ 늘어나는 조직갈등, 대산별이 해법

- 20여년에 걸친 산별노조 건설-강화 운동은 표면적으로는 성과를 냈다. 이미 조합원의 80% 이상이 산별(혹은 업종이나 지역)노조 조합원이다. 민주노총 가맹조직 중 금속과 공공운수, 전교조 등 주요 대규모 조직은 산별건설을 일정 정도 완료했거나, 마무리하고 있다.

- 산별강화와 함께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민주노조 투쟁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민주노총의 위상 약화와 조직 원심력의 작동이었다. 파편화된 임단투가 전개되며 총노동 투쟁은 실종되고 있으며, 과거 투쟁의 구심이었던 총연맹의 위상과 역할은 점차 ‘정책-대협 센터’로 축소되고 있다. 산별간 편차가 확대되며 발생하는 모순도 있다. 의결기구에서 소수산별의 형식적 과잉대표 현상이 나

타나는가 하면, 일부 거대산별의 경우 내용적 사보타지를 통해 전체 계급투쟁을 무력화하기도 한다. 이제 민주노총은 산별연맹의 공문 없이는 지역의 사업집행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 아울러 정치적 배려와 담합에 따라 형성된 현재의 16개 산별연맹 구도는 중첩되는 조직대상이 늘어나고 산업 융합화 등이 진행되며 조직갈등이 갈수록 거세지는 구조가 되고 있다.

- 산별편제와 관련해 갈수록 늘어나고 격화되는 조직갈등 문제를 볼 때, 더 이상 현재와 같은 16개 산별연맹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산별교섭'과 연결되지 않는 한국 상황에서 산별노조의 구획 문제는 더욱 해법을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정치적 이권에 따른 분화와 이합집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

-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대산별 건설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제조부문 △공공부문 △민간서비스부문의 '대산별 연맹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 대산별 공동요구안 수립과 이에 따른 공동투쟁 속에 서로간의 이해와 접점을 넓혀가고, 이와 같은 공동투쟁의 성과 속에 '조직혁신특위(가칭)' 등과 같은 조직 내 기구의 구성과 논의를 통해 2016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대산별 건설 로드맵을 전조직적인 동의 속에 결의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



미조직-비정규 조직화를 통한 계급대표성 제고

3

1. 중소기업-비정규직 조직화를 중심으로 한 '전략조직화사업' 강화

- 산별-지역-사업장 단위 조직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혁신
- 청년-학생-노년-이주 노동자 전략조직 확대-강화

2. 투쟁과 연결된 조직화

- 비정규직 조직화 과정에서 반드시 병행될 수밖에 없는 투쟁에 밀착 대응
- 투쟁이 곧 조직화다! 투쟁을 통한 비정규직 조직화 확대 전략 실현

3. 비정규노동자 조직운영 참여 확대

- 중소기업-비정규 노동자 대의원-중앙위원-임원 할당제 도입
- 비정규 사업장 대표자회의(가) 골간기구화 및 의결기구 참석, 이주노동자특위(가) 건설

■ '요구'와 '투쟁', '조직'의 불균형 해소

- 민주노총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요구를 핵심 주요 요구로 제기해 왔으나, 실제 투쟁을 의결하

고 집행하는 단위는 여전히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구와 조직구성 불일치의 효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각계약진식 투쟁으로 드러났다.

- 정리해고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 등은 과거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 전선을 이끌어왔던 투쟁요구였다. 민주노총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 조합원의 이해와 직결되는 이와 같은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했으며, 이를 ‘내 문제’로 받아들인 조합원들은 거리로 함께 쏟아져 나왔다. 물론 최근까지도 철도노조의 파업과 전교조의 노조사수 결사투쟁 등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끊이지 않으며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 씨앤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인천공항 비정규직, 대학청소용역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은 같은 기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점차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놓쳐서는 안 되는 주요한 흐름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투쟁’과 ‘조직’ ‘요구’의 불일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투쟁하는 단위가 실질적인 조직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혁파하고, 투쟁하는 노동자가 지도력을 구성해야 한다.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대의원-중앙위원-임원 할당제 도입과 비정규 사업장 대표자 회의(가) 골간기구화 및 의결기구 참석, 이주노동자특위(가) 건설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 전략조직화 사업 확대-강화를 통한 비정규직 조직화 주력

-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4.7%에 이르고 있고,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61%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고작 0.2%에 불과하다.

	수(천 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	12,003	4,925	1,438	18,396	65.4	26.8	7.8	100.0
정규직	10,167			10,167	54.1			55.3
비정규직	1,866	4,925	1,438	8,229	10.1	26.8	7.8	44.7

	수(천 명)						비율(%)					
	1~4명	5~9명	10~29명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1~4명	5~9명	10~29명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임금노동자	3,523	3,212	4,060	3,603	1,774	2,22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736	1,360	2,288	2,466	1,390	1,928	20.9	42.3	56.4	68.4	78.4	86.6
비정규직	2,787	1,852	1,772	1,137	384	298	79.1	57.7	43.6	31.6	21.6	13.4

	30명 미만	30명~99명	100명~299명	300명 이상
임금노동자수	10,482,000	3,429,000	1,765,000	2,087,000
조합원수	17,434	50,083	146,274	1,272,124
조직률	0.2	1.5	8.3	61.0

-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조직률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2기 전략조직화 사업 때부터 ‘중소영세 비정규직 조직화’를 내걸었다. 이는 방향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전략조직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돼야 할 부분이다.

- 5개 직종(업종)을 대상으로 조직활동가 양성에 주력했던 1기 전략조직화사업을 거쳐 중소기업-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대상으로 산별연맹-지역본부-비정규운동단체 연대사업에 주력했던 2기 전략조직화사업은 가맹산하조직의 전략조직화사업 활성화(금속-화학 공단조직화 사업, 공공부문 간접고용 조직화, 유통업종 조직화 등)에 영향을 미치고, 청년-이주 사업을 민주노조 내부에 등장시켰으나, 실질적인 중소기업 노동자 조직화에게까지 이르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3기 전략조직화 사업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이와 같은 ‘중소영세-비정규직 조직화’에 맞춰진 초점을 유지했으나, 실행 과정에서 산별연맹이 스스로의 계획과 결의 속에 진행해야 할 특정 업종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모

습을 조금씩 보이고 있다. 제조업 사내하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마트 비정규직 등, 조직화가 시급하고 조속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은 해당 산별조직의 결의 속에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며 진행되는 것이 옳바르며, 민주노총은 필요할 경우 산별조직의 조직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총연맹 차원에서는 이와 같이 산별조직이 전략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조직문화 혁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정을 수행하는 동시에, 산업 혹은 업종 분류로 조직주체가 서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조직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청년과 노년, 퇴직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각 가맹조직의 조직화 사업 발전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영역이다. 따라서 청년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실업계-실습생 교육-조직화 사업과 임박한 87년 노동운동 세대의 정년퇴직 이후의 활동에 대한 전략적 고민 등이 필요하다. 또 이주노동자 입국 후 교육과정에 개입해 노조가입을 안내하고 조직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 투쟁과 결합된 미조직-비정규 전략조직화

- 전략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또 하나는 ‘투쟁과 결합된 조직화 전략의 부재’라 할 수 있다.

- 비정규직 조직화 과정은 필연적으로 노조파괴 혹은 계약해지에 맞선 투쟁을 피할 수 없으며, 결국 이렇게 촉발된 투쟁의 성패 여부가 조직의 안착을 가늠한다. 또 특정 업종이나 직종을 대상으로 한 전략조직화의 경우, 이런 싸움이 조직 확대의 가능성을 열기도 한다. 자동차 사업장의 사내하청이나 희망연대노조의 통신사 비정규직 투쟁 등이 모두 이런 점을 보였다.

- 그러나 그간의 전략조직화는 ‘조직화’ 자체에 초점을 맞춘 채, 그 이후의 탄압에 통상적인 대응 수준에 머무르거나, 혹은 해당 산업이나 사업장의 투쟁으로 축소돼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전략조직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투쟁 역시 ‘전략투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만큼의 조직적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 비정규직을 조직 운영의 주체로

-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투쟁’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강조해 왔으나, 정작 비정규 당사자들의 투쟁과 연대에 대해서는 골간조직 활용 이상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 민주노총에서 비정규 운동 관련한 유일한 공식기구는 가맹산하조직의 비정규 사업 담당자가 참여하는 ‘미조직-비정규특위’ 뿐이다.

- 이러다보니 비정규 노조 간의 교류와 연대는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전비연)’이라는 외곽 기구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었으며, 최근 들어 전비연에 대한 비정규노조의 사업결합력도 갈수

록 떨어지고 있다. 이러다간 비정규노조의 연대투쟁은 유실될 지경이다.

- 따라서 비정규노조의 연대투쟁과 공동활동을 활성화하는 기구로 ‘비정규사업장대표자회의’를 설치-공식기구화하고, 중집 참여 등 의결권을 보장해 이들의 발언력을 의식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비정규단위의 공동투쟁과 연대활동은 ‘비정규대표자회의’가 주도토록 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또한 이주노동자특위 구성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힘을 더 하고, 산업과 지역으로 흩어져 조직되고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하나로 묶어세워야 한다.



직선제 시대에 걸맞는 조직민주주의 실현

4

1. 지도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임원-대의원 소환제도 강화, 불신임투표제 도입
- 일방적 파업 철폐·종료와 일방적 협상 체결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도입

2. 상임집행위원회 정무직화 도입

- 책임지는 지도부, 책임지는 집행부 실현

3. 민주노총 대의원 직선제 도입

- 주요 의결기구인 대의원 직선제 도입으로 책임성과 집행력을
동시 제고

- 민주노총의 관료화에 대한 지적은 귀가 닳을 지경으로 들려온다. 직선제가 실시되는 지금은 이를 혁신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이다. 투쟁혁신은 집행혁신 없이 이룰 수 없으며, 조직민주주의 실현은 민주노총을 조합원에게 돌려주기 위한 첫 번째 전제다.

-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의기구인 의장이자 집행기구의 책임자이며, 규약해석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위원장은 더욱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위원장에 대한 견제 기능은 부실하다. 올바른 지도력의 행사가 이뤄지며 조직-투쟁 강화에 복무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반대로 과거와 같이 사회적 합의주의를 강요하거나 금품수수나 같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파렴치를 저지르고도 자리 보전을 위해 버틸 경우에는 곧바로 민주노조운동 전체에 대한 타격이 된다.

- 이와 같은 패권과 독선을 막기 위해서는 임원과 대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를 강화하고, 불신임투표제 도입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규약-규정에 따르면 부위원장의 경우 선출기관인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발의 요건과 의결 요건도 각각 정하고 있다. (대의원 200명 이상 제출 및 과반 이상 안전상정 찬성, 재적인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 그러나 총회(직선제)에서 선출되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총회를 통한 불신임’을 정하고 있긴 하나, 구체적인 발의 요건과 의결 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다.

- 민주노총 임원과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부서 실장, 부설 기관장 등으로 구성되는 ‘상임집행위원회’는 일상적인 사업심의-집

행 전반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회의기구다. 민주노총은 과거 상임 집행위원의 임기를 해당 임원과 함께 하는 ‘정무직’ 제도를 실시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지 오래다.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고, 실무진의 사보타지로 선출 임원의 사업 추진력이 약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상임집행위 정무직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 마침내 민주노총 위-수-사를 직선제로 선출하지만, 총회의 개최 주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고 대의기관인 대의원대회의 위상과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현재의 대의원은 금속노조 등 일부 산별노조를 제외하고는 선출이 아닌 지명 형태로 선임되고 있다. 해당 지도부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기 쉬운 위험한 구조다. 책임감이 떨어지는 만큼 대의원대회 성사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회의에 불참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개인적 의견을 피력해도 비난받거나 해임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원직선제 실시 이후 과제로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하고, 실질적인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재정적 독립성 확보

5

1. 국가로부터의 재정적 독립

- 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비-인건비 보조금 지급 거부
- 조합비 정률제를 통한 재정자립구조 확보 및 정부보조금 반납

2. 정치세력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

- 국가(지방정부포함)로부터의 정치적 독립
- 자본주의 보수야당과의 전략적 야권연대 거부
- 입법쟁취 등 전술적 제휴 과정에서 노동자 요구안의 양보-후퇴 중단

- ‘정액 납부(1,400원)’를 근간으로 한 민주노총의 의무금 구조로는 안정적인 사업집행이 담보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금 격차에도 불구하고 같은 의무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대적 불평등이 전제된 제도다. 민주노총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률제 실시를 결의했으나,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최저임금 노동자 조합비 감면’ 제도(1,100원)만을 실시하고 있다. 조합비 정률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이를 위해 즉각적인 임금실태조사와 합리적인 조합비 정률제 시행방안 및 배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부보조금 반납 역시 실행에 돌입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열어놓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정부보조 수령' 방침은 부지불식간에 확대되며 일부 지역본부와 산별연맹의 사업비 수령으로까지 미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개입과 노조활동 위축, 자기검열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 가맹산하조직과의 공동논의를 통해 '정부보조금 반납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민주노총 중앙이 중앙정부로부터 수령하고 있는 정부보조금을 반납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기간에 결친 △조합원 기금 모금 △산별연맹별 조직발전기금 모금 등의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 재정적 독립성 확보와 함께 정치적 독립성 확보 역시 중요한 문제다. 주요 국가선거 때마다 이른바 '야권연대'가 당연한 듯 행하며 보수 야당에 대한 정치적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보수 정당과의 정치적 의존은 반드시 계급적 요구에 대한 양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수 야당과의 협력은 개혁입법을 위한 제한적인 제휴로 명확히 한정하고, 중앙집행위 이상의 기구에서 결의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무겁게 다뤄야 한다. 또 협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정치적 독립성을 명확히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여성의제의 부차화 극복

6

- 여성사업 대폭 강화, 여성위원회 위상 제고
-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한 성평등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조직문화 쇄신
- 성폭력예방 교육을 넘어서 여성주의에 기초한 전조합원 교육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는

3대 정치·연대전략



1

노동계급의 정치 실현 및 노동자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



- 배타적 지지방침 폐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민주노조 운동 내의 변혁적-진보적 정치세력 인정
- 진보정치의 다원화가 보수정치를 포함한 자유방임적 정치활동 보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변혁적-계급적 정치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경주
- 국가보안법 철폐 및 모든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 투쟁
- 교사-공무원 정치참여 봉쇄하는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법 전면 개정

-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정당성을 의심받아 온 '배타적 지지 방침'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 이후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도 공식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민주노총 안에는 여전히 '배타적 지지 방침'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이른바 '민주노총당' 건설을

주장하고 추진하는 세력도 큰 무리를 이루고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드러났듯, 배타적 지지방침은 현실에서 노동자 정치운동을 발전시키는 요소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분열만 부추기는 것이 이미 확인된 만큼, 이를 복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중단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변혁적-진보적 정치운동을 보장해야 한다.

- 아울러 ‘배타적지지 방침 철회’가 보수정치를 포함한 자유방임적 정치활동 보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변혁적-진보적 정치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하며, 이와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노동자계급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현장의 조건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들의 투쟁을 통해 계층, 계급, 성별 구별 없이 그 권리를 확대해 왔다. 현재 한국의 참정권은 대다수 국민에게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정치적 권리이고, 고등교육에 종사하는 대학교수들에게는 보장되어 있으나 공무원, 교사에게는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모순을 안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플랜 NAP를 통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OECD 국가 중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정당가입만이 아니라 기타 정치활동에 대해

서도 따로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UN 인권이사회, ILO, EI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

- 그러나 한국정부는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노조법 등을 통해 정치자금 기부 및 정당 가입 금지 및 일체의 정치활동, 선거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학교수와 달리 참정권을 억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권 시절 소액정치후원금을 이유로 1900여명의 교사, 공무원이 기소됐으며,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입장표명(시국선언 등) 조차 탄압의 대상이 되어 법적 처벌을 받고 있다.

- 공무원과 교원도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복리, 사회질서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반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과 교사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소액후원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반전-반제국주의 평화운동 강화



- △사드 배치 반대 △군비축소 △한미일 동맹 강화 반대 등 한반도-동북아 평화 실현 노력
- 동아시아 불안정에 맞서는 각국 노동자 연대 추진
- 남북 교류연대를 넘어서는 반제·평화운동으로, '통일위원회'를 '반전평화통일위원회'로 재편
- 분단 70년, 한반도 평화실현과 통일을 위한 남북 노동자 연대 추진

- 민주노총의 그간 통일운동은 '남북 교류-지원사업'에 멈춰 진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간의 특정 현안에 대해서도 북측의 입장을 고려해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 통일운동의 중심은 오히려 반전-반제국주의를 중심으로 대중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군비증강 반대 △주둔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동북아 평화 실현 등이 실현돼야 할 필요가 높다.

- 특히 최근 들어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중간 힘겨루기가 가속화되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으로 동북아시아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일 영토분쟁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동북아 불안정 증대가 장차 군사적 대결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교류증진’을 넘어서는 반전-반제운동의 실현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 남북 교류연대를 넘어서는 반제-평화 운동, ‘통일위원회’를 ‘반전 평화통일위원회’로 재편

- 남북 교류-지원사업에 멈춘 통일위원회 사업을 ‘반전-반제 평화운동’으로 확대한다.

■ 분단 70년, 한반도 평화실현과 통일을 위한 남북 노동자 연대 추진

- 남북한 노동계급 연대의 관점에서 공동사업 추진
- 분단 70주년을 맞아 △용산 △대구 △원산 △신의주 ‘남북 노동운동 역사 복원’ 등 추진

■ 한반도-동북아 평화 실현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비증강 반대 △주둔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 당면 과제로 △주한미군 한반도 THAAD배치 반대 △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저지 및 한미일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 체결 반대 운동 △F-35 구매등 불필요 과잉전력 예산 삭감 운동 등 돌입
- 동아시아 불안정과 전쟁위협에 맞서는 각국 노동자 국제연대 실현

‘사회연대위원회’ 건설로 민주노총이 중심에서 연대운동 강화 복무



- 반자본-반신자유주의를 기치로 한 새로운 전선운동 강화
- 노-농-빈 계급대중조직 연대 강화
- 사안별-의제별 범사회적 공동대응기구 활성화
- 세월호 참사 등 전사회적 투쟁에 대한 전조직적 대응 강화
- 생태-환경-빈곤 등 부문운동 및 장애-이주-성소수자 등 소수자 운동과의 적극적인 연대 실현

- 한국진보연대와 민중의 힘 등, 그간 지속됐던 연대운동의 흐름은 현실적으로 연대운동의 발전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선운동의 후퇴를 불러왔다. 투쟁 속에 형성된 전반적인 동의 없이 특정 세력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연대체는 서로에게 모두 상처만 남길 뿐이란 점이 가장 학습 가치가 높은 교훈이었다.

- 반자본-반신자유주의를 기치로 한 전선체 운동 강화는 매우 시급하고 정당한 과제다. 이 과정에 주요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앞장서야 하며, 농민-빈민 등 기층 계급 대중조직이 앞장서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 상층의 전선체가 아니라 가맹산하조직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활동할 수 있는 통로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중운동을 기반으로 한 전선체 운동이 가능하며, 상층과 특정 세력 간의 연대를 넘어서서 기층 조직의 전선운동 참가를 기대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상설 투쟁체 구성과 함께, 사안별-의제별 쟁점화와 집중적인 사업 집행을 위한 공동대응기구 역시 금기시 돼서는 안 되며, 더욱 폭넓은 연대의 장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적극 추진돼야 한다.

- 세월호 참사의 경우,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계급대중운동의 한계를 민낯으로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파업조직화의 부재라는 관점에서도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2014년 상반기 대표적 민중투쟁이었던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위치와 역할은 과거 사회적 투쟁을 이끌고 견인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수많은 국민대책회의의 참가단체 중 하나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실제 주체 스스로도 그 정도 수준의 역할을 설정하고 만족하는 태도를 보였다. 예컨대 지역본부와 산별노조 중심으로 충분히 조직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 서명운동을 위한 유가족 순회 지원이 중앙의 주요 핵심 사업으로 격상되고, 같은 시기 진행돼야 했던 6-7월 투쟁조직화를 위한 현장사업이나 세월호 이슈의 정치화 혹

은 박근혜 퇴진 투쟁으로의 발전을 위한 계급적 노력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은 그 대표적인 경우다.

- 따라서 전사회적 투쟁과 광장의 저항에 연대하는 민주노총의 모습을 되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대외협력실’ 수준으로 정체돼 있는 연대사업을 대폭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회연대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집행 단위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에 맞선 총파업 선거운동본부

Q&A

Q 산별연맹이나 지역본부 등 상급단체 활동 경력이 없는
위원장 후보가 민주노총을 잘 이끌 수 있는가?

Q 왜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조는
'혁신'보다 '투쟁'을 전면에 내걸었는가?

Q 왜 2015년 하반기 총파업인가?

Q 모두가 강조하는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의 계획은 무엇인가?

Q 왜 좌파후보 단일화는 좌절됐는가?

Q 이른바 '통합' 지도부가 '단결'을 보장하는가?

Q 산별연맹이나 지역본부 등 상급단체 활동 경력이 없는 위원장 후보가 민주노총을 잘 이끌 수 있는가?

A 민주노총 직선제는 조합원을 조직의 주인으로 세우는 조직혁신-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막상 직선제를 한다고 하니, 좌우를 막론하고 지난날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 연맹 위원장, 지역본부장 등 ‘한자리’씩 했던 사람들이 다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선다. 모두가 민주노총의 핵심 집행기구이자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 출신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혁신과제들을 왜 자신의 지도부 임기 중에는 이루지 못했는지 모를 일이다. 민주노총의 분열과 약화, 도덕적 상처 등이 모두 이들의 집행 기간에 생겨난 일들이다.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유체이탈 화법’이 아닌 바에야,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 먼저 성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처럼 다른 후보들이 ‘높은 한자리’씩 차지하고 민주노총을 후퇴시키는 그 기간 동안, 한상균 후보는 묵묵히 현장에서 파업을 조직했다. 그리고 77일간의 정리해고 분쇄 파업을 벌여냈고, 그렇게 다져진 조직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며 공장 안팎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직선제가 도입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을 후퇴시켰던 상층 간부 몇몇이 회전문처럼 돌아가며 다시 지도부를 자임하는 간선구조를 혁파하고, ‘관료’가 아닌 현장 투쟁을

통해 검증된 ‘노동자’를 지도부로 세워내기 위한 것이 바로 직선제다. 조직운영이 걱정된다면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던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대중적으로 천명하면 될 일이다.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조직 안정과 투쟁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상급단체의 경험이 없는 것은 한상균 후보의 약점이 아닌 강점이다. 민주노총에 현장의 힘을 불어 넣고, 그 활력으로 민주노총에 날개를 달아야 한다. 싸움을 조직해본 사람들, 정권에 맞서 실제 투쟁을 벌였던 사람들이야말로 직선제 시대에 필요한 집행부의 상이다.

Q 왜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조는 ‘혁신’보다 ‘투쟁’을 전면에 내걸었는가?

A 현재 민주노총은 혁신 없이 투쟁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다. 계급대표성의 문제, 산별체계의 문제 등등을 지적한다. 그러나 혁신의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누군가 책상머리에서 조직구조를 새로 그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투쟁을 통해서만 민주노총은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거듭날 수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제대로 투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누적해 왔다. 정리하고·구조조정의 칼바람으로부터 조합원들

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비정규직의 증가와 열악한 처지를 함께 짊어지며 해결하지 못했고, 촛불 시민들이 파업을 호소할 때도 응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잊혀진 희망, 이렇게 해서 떨어진 사회적 위상을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민주노총을 투쟁 조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투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지도부부터 반성하고 말대로 투쟁하는 언행일치 지도부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현장이 처져있는데 투쟁이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아무리 처절하게 싸워도 연대가 없어 역부족으로 꺾이고, 때로 지도부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서 투쟁을 종료하거나 철회하면서 패배감을 쌓아온 것이다. 지도부가 단호하게 투쟁을 선언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확신을 주고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투쟁에 나서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투쟁 근육도 키우고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다. 이럴 때 기층에서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조합원들이 생기 있는 투쟁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조합원들 자신이 활발하게 투쟁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산별·연맹의 협력을 얻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 또한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스스로 투쟁에 나서

는 것을 통해서만 변화의 힘을 제공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계급대표성을 인정받고 비정규-영세사업장 조직율을 높일 수 있는 힘도 투쟁을 통해 희망을 보여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Q 왜 2015년 하반기 총파업인가?

A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조는 각종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박근혜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힘을 총 결집하는 한 판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정책들과 관련된 법제도 개악 저지 및 개선 과제를 총화해 하반기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공무원연금, 비정규직, 임금, 노동기본권 등 상반기 투쟁을 모아내고 하반기로 투쟁을 이어가려는 구상이다.

당선 후 처음 맞는 상반기에 결정적 힘을 모아 판가름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반기 총파업은 투쟁을 하반기로 미룬다는 뜻이 아니라, 상반기 동안 각 부문의 투쟁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하반기에 모아내려는 것이다. 상반기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반기 총파업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객관적 정세와 주관적 조건으로 시기 조정이 필요할 수 있

다. 정치 상황이나 국회 일정 등이 고려돼야 할 수도 있고, 우리 편의 투쟁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일정이 점검돼야 할 수도 있다. 만약 상반기에 투쟁이 역동적 상황으로 발전한다면 총파업 일정을 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 위기 시기에는 정치적 변화도 역동적이므로 이런 상황에도 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하반기 총파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되, 구체적 상황 변화에 따라 우리 편의 투쟁이 가장 유리한 시기로 조정 여지를 열어두면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다.

Q 모두가 강조하는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의 계획은 무엇인가?

A 매번 선거 때마다 민주노총의 미조직-비정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재정 확충 공약은 모든 후보의 단골 메뉴였다. ‘사업비의 30%’에서 시작된 공약 경쟁은 심지어 지난 2010년 위원장 선거에서 한 부위원장 후보가 ‘사업비의 50%’를 제시하며 정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은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이는 충분한 실사나 계획 없이 ‘당위’ 수준에서 논란이 오갔기 때문이다.

인력과 재정이 그저 ‘선언’ 만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오류와, ‘무조건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는 식으로 선명성에 기대

는 사고는 지양해야 한다. 10년에 가까운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이 펼쳐지며 ‘비정규직 조직화’는 더 이상 외면하거나 뒤로 미룰 수 없는 사업이 됐다. 과거 비정규직 조직화에 소극적이던 산별연맹들도 점차 나서고 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각 가맹조직(산별연맹)과 산하조직(지역본부), 각 단위 사업장이 자기 산업과 지역, 사업장의 비정규노동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하도록 추동하고 지원하는 이른바 ‘조직문화 혁신사업’이 더욱 전진 배치되어야 한다.

최근 비정규직 조직화의 양상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투쟁을 통한 조직화’다. 실제로 통신사 비정규직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의 투쟁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성과를 이뤄내며 전체 산업으로 확대되는 경로를 밟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조직화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계약해지나 노조파괴에 맞선 투쟁을 총노동차원에서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 과거 ‘해당 사업장의 투쟁’이나 ‘해당 산별-지역의 투쟁’으로 미루고 머무르게 해서는 안된다. 투쟁 속에 조직화가 있다.

그러나 투쟁을 통한 조직화라는 큰 틀에서 보더라도 결국 예산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특성상 경직비용이 많고, 사업비의 비중이 14%에 불과한 현재 민주노총의 재정 구조로는 비정규직 등 투쟁하는 단위의 전반을 책임질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재정자립구조 혁신 속에 고민돼야 할 문제지만, 그때까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비정규 조직화와 투쟁을 그냥 둘 수도 없다. 따라서 사업비에서 비정규사업비의 비율을 30%까지 점차 높여나가는 노력과 더불어, 전사회적인 ‘비정규-투쟁 기금’ 운동을 함께 펼쳐야 한다. 일부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파업기금 운동’이나 비정규직 공단 공제회 사업 등, 산별이나 민주노총의 벽을 뛰어넘는 사회적 운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참고] 민주노총 2014년 예산 개요

예산총액	지역본부 교부금	국제의무금	운영비	사업비	기타지출
약 86억	약 45억	약 8천	약 22억	약 12억	약 6억2천
100%	52.3%	0.9%	25.6%	14.0%	7.2%
				비정규사업비 3억 *사업비 대비 25%	직선제적립금 등

Q 왜 좌파후보 단일화는 좌절됐는가?

A 지난 9월 20일 노동전선의 제안으로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공동 대응’을 위한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9월 26일 2차 회의에서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 좌파노동자회 등은 각각 공동 대응 기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 단체들은 현 정세가 요구하는 투쟁과제를 전면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투쟁하는 지도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또, 혁신과 정치세력화 문제 등에 관해서도 공동 기조의 대강을 토론하고 향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후보 선출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동 대응 논의에 참가하는 단체들 가운데 노동전선과 좌파노동자회가 후보를 낼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한 단일화 방안이 마련돼야 했지만, 모두 만족할 만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좌파노동자회는 노동자 선거인단을 모아 경선을 치르는 ‘예비경선’ 방안이 단체 규모에 따른 유불리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며 반대했지만, 대안적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좌파노동자회 측 책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합원 1만 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시행하는 ARS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인지도 조사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고 운동적으로 설득력 있는 방안이 못했다.

또한, 좌파노동자회는 이미 참가 단체들이 합의한 ‘공동대응의 기조와 방향’ 외에 좌파노동자회가 제출한 ‘5대 혁신과제’가 수용돼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결국 10월 6일 좌파노동자회는 좌파 공동 대응 논의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리를 떠났다. 좌파들이 단일한 후보를 내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보려던 노력이 결실을 거두

지 못한 것은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나머지 단체들은 투쟁하는 지도부 구축을 위한 좌파 공동 대응의 의의를 확인하고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좌파 진영에서 여러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10월 중순경 다시 한 번 단일화 논의가 시작됐다. 이 자리는 김중남 동지, 이호동 동지, 허영구 동지, 그리고 한상균 동지가 참가했다. 그러나 몇 차례 논의가 이어졌지만, 역시 단일화의 방식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좌파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에 바탕해 공동 대응을 유지하고 단일화를 이뤘다면 더 없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의 방향과 과제에서 이견이 있다면, 조합원들에게 가감 없이 의견을 밝히고 지지를 묻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은 현 시점에서 조직 혁신보다 투쟁 과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며, 투쟁을 통해서만 혁신의 동력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기에, 여러 좌파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자신의 고유한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대의를 위해 공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진정성을 바탕으로 민주노총을 투쟁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바람과 만나기를 바란다.

Q 이른바 ‘통합’ 지도부가 ‘단결’을 보장하는가?

A 처음으로 치러지는 민주노총 직선제를 앞두고 직선제 선거를 무탈하게 치르기 위해 ‘통합후보’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직선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이다. 직선제를 조용하게 치러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직선제를 통해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의 지난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마치 ‘통합’ 지도부를 내면 단결을 이룰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총이 반목으로 분열하거나 잘못될 것처럼 말하는 것도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지금 ‘통합’ 지도부를 내세우는 후보조는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총 지도부를 배출한 세력들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 민주노총의 위기에 주된 책임이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 지도자들의 거듭된 후퇴와 투쟁 회피 속에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상당히 잃어버렸다. 지도부 일원의 금품 비리와 성폭력 은폐는 민주노조운동의 위신을 떨어뜨렸다.

이것은 민주노총 조합원, 더 나아가 이 땅의 노동자들을 더 크게 단결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오히려 민주노총은 이런 문제들을 채신하고 투쟁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때, 노동자의

더 큰 단결을 이룰 수 있고 1800만 노동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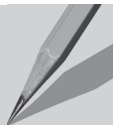
요컨대 민주노총 지도부를 배출해온 세력들 사이의 ‘통합’은 집행권 유지를 위한 ‘봉합’일 뿐,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단결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현재 네 후보조나 입후보한 마당에 자신들을 ‘통합지도부’라고 자임하는 것도 가당치 않은 일이다.

게다가 지금 ‘통합’ 지도부를 내세우는 후보조는 그동안 서로 갈등과 반목이 심했던 세력들이라 민주노총의 단결 이루기는 고사하고 자신들끼리의 통합이라도 유지 가능한지 의문스러운 지경이다.

공통의 인식과 전망 없이 단지 당선을 목적으로 무원칙하게 ‘통합’했다면, 갈등과 반목의 씨앗이 언제 고개를 내밀어 통합진보당 사태처럼 또다시 민주노총 내부의 분열을 증폭시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민주노총을 뭉치게 하는 것,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것은 투쟁을 회피해 온 지도자들의 답습으로는 이룰 수 없다. 그것은 말한 대로 투쟁을 이끌고, 투쟁 속의 단결을 추구하는 투쟁적인 지도부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100만 공무원과 400만 공무원 가족의 노후생존권을 재벌의 아가리에 처넣겠다고 버르더니 급기야 올 연말까지 개악하라고 정치권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당수 김무성은 이에 화답하여 맞아 죽더라도 반드시 연내처리를 하겠다고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학살이 일어나고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는 정작 7시간이나 행방이 묘연했던 박근혜와 생색내기식 겉치레 방문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했던 새누리당을 온 국민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무관심, 무능했던 이들이 공무원연금 해체에는 서로 앞 다투어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연금개악안의 초안을 재벌보험사, 개인연금연구소, 금융투자협회등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한국연금학회에 맡길 때 이미 공무원연금개악의 목적은 공무원연금 파괴하고 이어서 국민연금도 파탄내는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박근혜는 한편으론 일반노동자의 퇴직금을 연차적으로 전면 퇴직연금화하여 일반노동자의 퇴직후 생계비마저 주식시장으로 강

제로 매몰아 재벌들의 돈놀이 자금으로 빼앗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기능을 파괴하여 사적연금으로 대체시켜 결국 공적 연금시장 전체를 재벌기업의 돈벌이 황금어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퇴직금의 퇴직연금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해체는 1%재벌의 이윤을 위해 99% 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은 99%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의 최전방에 배치된 전선이며 임기말로 갈수록 위기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친자본 반민중적 박근혜 정권과 한판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 후반기입니다. 이제 큰 전쟁의 서막은 공무원 연금 개악저지 투쟁입니다.

이 큰 싸움에 민주노총과 민중진영이 함께 엄호하고 함께 전선에 나란히 서야할 것입니다.

투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투쟁을 해 본 사람이,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질기게 투쟁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기풍이 민주노총의 자랑스런 투쟁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투쟁하는 민주노총, 전투적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을 만들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한상균, 이영주, 최종진 동지라고 믿습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사무처장 김정수

11월14일이면 생략 파업투쟁 200일이다. 신생노동조합에 노조설립 3개월만에 결행한 파업이 오늘에 까지 왔다.

누가 이 늙은 노동자들을 파업 200일차의 길거리로 내몰았는가?

자본과 아득한 성벽같은 정권이다.

우리 노동자들이 들불처럼 일어서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자의 미래는 없다.

입으로만 하는 투쟁은 필요치 않다. 오로지 행동하는 투쟁, 이 정권에 맞서 싸울 강력한 지도력을 겸비한 후보가 필요할 뿐이다. 자본의벽,정권의벽을 타고 넘을 수 있는 후보가 절실할 뿐이다.

—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 송복남

해고되어 죽어가는 소식을 외로운 갯뼉에서 들어야 했던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모두 함께 살자고 77일을 함께 투쟁했던 공장을 하늘 위에서 바라봤던 그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 생각과 마음을 민주노총 선거에서 말하고자 하는 듯하다.

파업! 그것도 고립되지 않은 파업! 지역을 넘어, 산별을 가리지 않고, 민주노총 모든 사업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총파업!

노동자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자가 승리하기 위해 총파업에 모든 것을 바치리라 믿는다. 조합원을 믿고 투쟁을 선택할 동지를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최병승, 296일 굴뚝농성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염원합니다.

노동자 민중 투쟁의 단결과 연대를 모아내고 집행하는 민주노총을
염원합니다. 연대와 투쟁을 실천하는 동지들이 아니면 누가 민주
노총을 혁신하겠습니까? 연대와 투쟁을 온 몸으로 보여준 동지들
이 아니면 누가 민주노총을 투쟁하게 만들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동지들로 한번 바뀌봅시다!

— 공공운수연맹 철도노조 전 위원장 엄길용

오랫동안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노동자의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투
쟁하는 민주노총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현장은 싸우고 지
도부는 구경만 하는 민주노총은 필요 없습니다. 이번 직선제 선거
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합쳐
서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만드는 일에 중요한 첫 출발이 될 수 있
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 전교조 서울지부 이을재

민주노총이 혁신을 해야하는 과정에서 아래로부터 현장을 조직하
는 지도부, 자본과 정권에 맞서 한 판 싸울 수 있는 지도부, 말로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직하는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 금호타이어지회 곡성지회 신호식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민주노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위 사업장들의 어려움과 투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고 힘이 돼주는 민주노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주노총에 부합하는 후보가 민주노총 직선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의 의미는 무기력한 민주노총이 자본과 정권에 맞서 올곧게 투쟁하기 위해 조합원 동지들의 의지를 하나하나 모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정권과 자본에 맞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동지를 위원장으로 뽑아 투쟁하는 민주노총, 계급적 단결을 공고히 하는 민주노총을 만들어갑시다!

—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호중

10년째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병승 동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25일간의 공장 점거파업을 비롯해서 수많은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불법파견을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은 정몽구 회장을 비롯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재벌에 맞서 승리하는 것은 전체 비

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투쟁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단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최저임금 문제 등을 걸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법을 다시 개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지금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케이블통신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함께 이끌어갈 투쟁지도부를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절실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힘차게 투쟁을 조직해왔던 기호 2번 한상균, 최종진, 이영주 후보를 지지합니다.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김성욱

6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대구 성서공단은 사업장 92%가 50인 미만인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장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노조 조직률 0.04%에 처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성서공단은 작은 공장의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이 시간에도 숨죽이며 절망 속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서공단 같은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의 조직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만의 민주노총이 아니라 배

제와 차별 속에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고, 큰 박수를 받는 민주노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민주노총의 임원 직선제는 커다란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저임금제를 생활임금제로 바꾸어내는 일!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일터를 만드는 일!

파견 근로자와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일!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하는 일!

나이가 모든 노동자, 민중들의 고난에 찬 삶과 함께 하는 민주노총!

이러한 일들은 누구나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만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후보들의 말과 공약 속에 간혀있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땀 흘리고 행동할 수 있는 민주노총 임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기호 2번 후보들이 현장에서 거리에서 투쟁해왔던 삶들을 저희들은 기억하기에 6만 작은 공장 노동자들의 열망을 모아 신뢰를 보냅니다.

공장이 바뀌고 공단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힘들지만 즐거운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 성서공단노동조합 임복남

적당히 타 단 한번의 승리가!

2

한상균 위원장 후보

생용자동차노동조합 전 설립 추진위원장
생용자동차 전 지부장
(77일간 파업/3년 구속)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출전탑 공공농성(171일)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후보

서울지하철노조 전 차리지부장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전 사무처장
민주노총 전 서울지역본부장

이영주 사무총장 후보

전교조 전 분회장(17년), 지회장
전교조 서울지부 전 수석부지부장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 중앙위원/대의원



쌍용차 파업

박근혜에 맞선
전교조

이명박과 싸운
서울지하철



싸우는 방법을 잊어버린 민주노총, 싸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현장은 죽을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쌍용차 77일, 현대차 비정규직 25일 접거파업, 유성기업과 SJM 접거파업, 삼성전자서비스, 철도노조, 건설노조, 화물연대, 화강연대노조... 현장 조합원들이 공장을 멈췄습니다!
한진중공업 309일 고공농성, 현대차 296일 철탑농성, 쌍용차, 대우조선, 한국지엠, 유성기업, 스타캐미칼...
우리 조합원들이 하늘에 올랐습니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수많은 노조탄압·복수노조 사업장들...
민주노총 노조들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 민주노총 지도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잘못된 합의를 보고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민주노총을 십 수년간 잡고 흔들고 다수임을 자랑하던 정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직선제를 한다고 하니, 좌우를 타분하고 지난날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 연맹 위원장 등 '한 자리씩'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겠다고 나섭니다.

낡은 것과 결별하지 않는 단결은 무의미합니다!

무기력하고 존재감 없는 민주노총을 만든 세력들이 힘있는 민주노총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단결이라는 미명아래 정파간 나눠 먹으면서 강한 민주노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절제절명 백치간두에 선 민주노총,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려서는 안됩니다.
낡은 것과의 단결, 새로운과의 만남이 우선입니다.
싸우는 방법을 잊어버린 민주노총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싸움을 조직해본 사람들,
정권에 맞서 실제 투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투쟁하는 민주노총
언행일치 지도부

2015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투쟁해야 혁신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총의 혁신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혁신은

무기력을 벗고 민주노총을 투쟁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투쟁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을 때만 조직 혁신도 가능합니다.

형식적 동원, 생색내기 투쟁은 피로도만 쌓이게 합니다. 박근혜의 파상공세를 막으려면 노동자들이 한만 크게 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간질로 노동자들을 각개격파하려는 박근혜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과 민간부문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부터 승기를 잡자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표하자 12만 명이 즉각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결코 공무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개악, 공공서비스 민영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포문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철밥통' 논리를 넘어 민주노총 차원의 방어 전선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 전 조직적 투쟁으로 돌파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투쟁을 전체 노동자 투쟁으로!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폐기돼야 합니다. 간접고용을 비롯해 특수고용, 학교비정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척결하게 투쟁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사내하청 공동투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투쟁을 당사자들만의 투쟁으로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비정규직 공동 투쟁을 조직하고, 정규직 연대를 더하겠습니다.

● 현장 임투-임금체제 개악 저지-최저임금 쟁취

노동자들의 임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금기가 0%대로 떨어졌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임금 투쟁을 개별 사업장의 문제로 다뤄 왔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임금체제 개악 공격에도, 최저임금 억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공격받는 지금, 현장 임투-임금체제 개악-최저임금을 묶어

전 계급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법제도 개선 과제를 총화해 하반기 총파업으로!

박근혜 정부는 공적연금 개악, 민영화 추진, 임금체제-통상임금 개악,

비정규직 양산 등을 위한 법제도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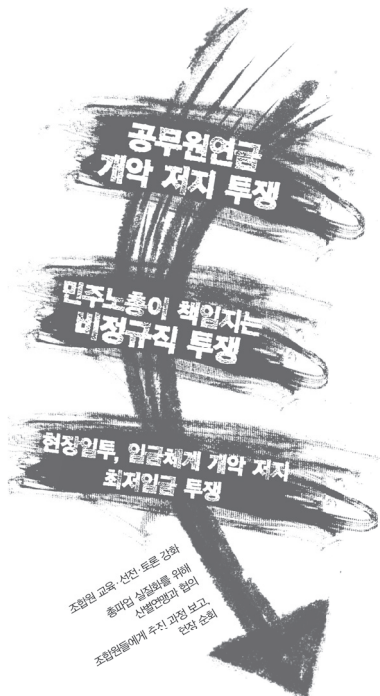
경리해고, 손배가압류, 노동기본권,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에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고, 저항을 가로막는 법제도에

맞서 하반기 총파업을 조직하겠습니다.

반민주와 부패, 부자 특혜 등으로 얼룩진 이 정부를 향해 '박근혜 퇴진'을

공세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무기력을 넘는 노동자 승리 전략

민주노총을 재건하는 6대 혁신전략

- **민주노총 20년, 2015년을 혁신과 재건의 해로!**
- **‘지역운동 강화’, ‘대산별 구축’ 씨줄·날줄 동시 강화**
지역본부 예산과 인력 확충, 지역 대의원·중앙위원 확대
대산별 구축
- **미조직·비정규 조직화를 통한 계급대표성 제고**
투쟁과 연결된 조직화
비정규노동자 조직운영 참여 확대
- **직선제 시대에 걸맞는 조직민주주의 실현**
상임집행위원회 정무직화, 민주노총 대의원 직선제 도입
- **민주노총의 정치적·재정적 독립성 확보**
조합비 정률제를 통한 재정자립구조 확보
국가, 자본주의 보수야당 등 정치세력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
- **여성사업 대폭 강화, 여성위원회 위상 제고**

민주노총을 승리로 이끄는 3대 투쟁전략

-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으로 박근혜와 한 판 대결**
- **임기 내 일대 전진을 이룰 핵심 투쟁의제**
노동기본권 쟁취 및 노조법 전면 재개정
비정규직 철폐 및 권리보장
임금체계 정상화 및 최저임금·생활임금 쟁취
민영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저지 및 정리해고 철폐
공적연금 정상화 및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 **투쟁 방관은 그만, 현장이 곧 민주노총이다**
노동·자본 대리전 의미를 갖는 현장 투쟁을 노동계급 전체 투쟁으로
장기투쟁 등 현장의 요구와 일맥상통하는 전국 계급투쟁 전선 구축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는 3대 정치·연대전략

- **노동계급의 정치 실현 및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
- **반전·반제국주의 평화운동 강화**
‘통일위원회’를 ‘반전평화통일위원회’로 재편
- **‘사회연대위원회’ 건설로 민주노총이 중심에서 연대운동 강화 복무**

